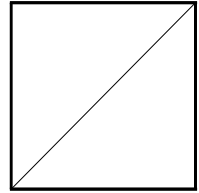


공 개



의안번호	제 5 호
보 고 연 월 일	2022. 2. 9. (제 3 차)

보
고
사
항

민사소송 시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
대응방안 보고

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

제 출 자	위원장 도 규 상
제출 연월일	2022. 2. 9.

1. 보고주문

민사소송 시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.

2. 보고이유

외부감사인에 대한 부실감사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사건 기록 송부 요구 시 자료제출 운영방안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함

3. 주요골자

가. 현행 제출 자료

☐ (대상사건) 증선위가 검찰고발·통보하지 않은 사건*

* ❶피의사실 공표죄(형법§126) 해당 우려, ❷재판 및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(정보공개법 §9④4.) 등을 감안하여 3년 비공개로 운영

☐ (제출서류) 금융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서류에 한해 제출

구분	보유서류	공개사건	비공개사건
금융위보유	증선위 안건 및 의사록	△*	X
	감리위 안건 및 의사록	X	X
금감원보유	문답서, 질의서 및 답변서	X	X
	감리증거자료, 감사조서 등	X	X

* 홈페이지에 공개된 안건 그대로 제출 (익명처리 및 안건요약 삭제)

나. 현행 제출 범위의 근거

☐ 현행 제출 서류 범위는 외부감사법과 민사소송법, 정보공개법 등을 고려하여 문제의 소지가 없는 사항에 한정하여 설정된 측면

① (외부감사법) 금융위·금감원 직원은 감리업무 수행 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음

- ② (민사소송법) 민사소송상 소송당사자의 제3자에 대한 법원의 문서 제출 요구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
- ③ (정보공개법) 국민이 정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더라도 재판,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 가능

⇒ 민사소송법, 정보공개법의 경우 “제출거부권”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, 외부감사법은 비밀에 대해서 “제출거부의무”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

다. 외부감사법 개정안(이용우의원 안) 내용과 쟁점

※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

제31조의2(기록의 송부) 법원은 제31조에 따라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해당 사건의 기록(증권선물위원회 안건, 의사록 및 그 밖에 재판상 증거가 되는 감리 조사 자료를 포함한다)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□ 회사·투자자·제3자(정보이용자)가 회계법인의 외부감사업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경우, 법원이 증선위에 감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명시적으로 마련

□ 개정안은 비밀유지의무(§20)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법 개정시 제도운영에 유의할 필요

* 다만, 동일한 법원 자료제출요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에서도 비밀유지의무와 법원의 자료제출요구권간 관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

① (1안) 비밀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만 법원에 자료 제출

-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닌 만큼, 피조치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만 법원에 제공

② (2안) 법원의 자료제출요구권이 비밀유지의무에 우선된다고 보아 법원의 자료제출에 적극 부응

- “신법우선원칙”에 따라 법원의 자료제출권에 대응하는 행위에는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된다고 해석 (비밀유지의무가 존재하는 한 새롭게 도입된 법원의 자료제출요구권은 형해화되는 점 감안)

⇒ 자료확보를 위한 **납소가능성**, **피조치자의 영업상 비밀**에 대한 **보호장치 부재** 등 **감안 시 (1안)대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**

※ 다만, 법 개정 완료 시 공정거래법 등 유사 법률을 운영하고 있는 부처의 사례를 감안하여 자료제출 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 고려 가능

① 투자자뿐 아니라 회사, 정보이용자 등 **다양한 주체가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소송 제기가 가능한 만큼, 감리 관련 자료확보 목적의 소송이 남발***될 가능성

* 예) ❶ 피조치자인 회사가 증선위 결정에 불복하기 위한 행정소송 과정에서 감리자료 확보 목적으로 소송제기
❷ 피조치자에 적대적인 주체들이 기업 영업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자료수집목적으로 소송제기 등

② 원고가 **소송과정에서 지득한 영업상 비밀의 소송외 목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부재**

* 공정거래법에서는 법원이 소송과정에서 제출된 비밀에 대해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고, 비밀유지명령 위반시 징역2년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

라. 외부감사법 개정전 법원의 자료요구에 대한 대응

□ 외부감사법상 **비밀준수의무와 자료수집 목적의 납소가능성**을 감안할 때 법원에 대한 **제한적 제공이 불가피**

① **(신청당사자) 투자자(주주)로 한정**

* 회사와 제3자는 피해보전보다는 피조치회사의 정보수집 목적이 더 클 가능성

② **(대상사건) 원칙적으로 공개사건에 한하여 제공**

- 다만, 비공개사건이더라도 집단소송 제소 등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큰 경우 검찰이 기소했거나 수사가 종결된 사건은 검찰의 수사상황 및 조치결과를 첨부하여 제출

③ **(제출서류) 현행제출서류(홈페이지에 공개된 익명처리된 안전, 의사록)에 감사인에 대한 지적사항 관련 부분을 추가 제출 (회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제외)**

i) **증선위 안전 및 의사록** : 증선위 안전 중 감사인에 대한 지적부분에 대해서는 요약을 포함하여 불임자료까지 모두 제출

ii) 감리위 안건 : 집단소송 제소 등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큰 경우에 한하여* 감사인의 내부분서, 문답부분을 삭제 후 제출

* 외부감사규정(§30⑫)에 따른 감리위 비공개 원칙, 비밀준수의무등 감안

iii) 기타 금감원의 조사 기초자료 : 피조치자 내부분서, 문답서 등은 비밀에 해당될 가능성이 큰 만큼, 영업상 비밀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미제출

구분	보유서류	공개사건	비공개사건
금융위보유	증선위 안건 및 의사록	○	△**
	감리위 안건 및 의사록	△*	△**
금감원보유	문답서, 질의서 및 답변서	X	X
	감리증거자료, 감사조서 등	X	X

* 원칙적으로 미제출하되, 다수 투자자가 제기한 사건은 내부분서 등 삭제 후 제출

** 피해자가 다수로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크며, 수사가 종결된 사건은 제출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규(붙임)

(붙임)

관 계 법 규

□ 「민사소송법」

제344조(문서의 제출의무)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.

1.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
2.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
3.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,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. 다만, 다음 각목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가. 제304조 내지 제306조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있는 문서로서 같은 조문들에 규정된 동의를 받지 아니한 문서
 - 나. 문서를 가진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하여 같은 조에서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
 - 다. 제31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

②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문서(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)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.

1. 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문서
2.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

□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

제20조(비밀엄수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. (단서생략)

1. 감사인
2.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
3. 증권선물위원회 위원
4. 감사 또는 감리 업무와 관련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를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자
5.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관련자

□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

제9조(비공개 대상 정보) ①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.
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~3. (생략)

4.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교정(矯正)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
5.~8. (생략)

□ 「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」

제30조(감리위원회의 운영) ① ~ ⑪ (생략)

⑫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
소관부서	기업회계팀
연 락 처	02-2100-2695